

# '하나의 시설' 이 아닌 '하나의 공간'

단 상



장기소  
영행군외장

지난 5월11일 월요일, 영행군 가정행복과 공무원과 학부모 한 분과 함께 정읍시 메이플랜드를 찾았다. 정기휴무일이라 방문객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시설 구석구석을 차분히 둘러볼 수 있었다. 실내 키즈카페 '천사하이보즈'와 야외 복합 놀이공간 '기적의 놀이터'를 잇따라 살펴보면, 평소 끌어왔던 소신을 다시금 확인했다. 아이들이 정경으로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은 '달 갖춰진 시설 하나'가 아니라 '살내와 아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넓은 공간' 그 자체라는 점이다.

나는 의정활동을 시작한 2007년부터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청년 정착 지원과 출산·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힘을 쏟았던 사업이 바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좁은 단밀 시설 몇 개만으로는 결코 넓은 가족의 발걸음을 뚫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간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한곳에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번에 둘러본 메이플랜드가 바로 그 사례였다. 약 6만평 부지에 천사하이보즈 키즈카페, 기적의놀이터, 국민이거점공간, 인스트립스포츠시설, 통화마을, 디지털 미디어 아트센터, 수상레저 및 수상체 체험존, 입산율 제향단지 등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시설이 한데 모여 있었다. 아이들은 실내에서 뛰놀고 그대도 잔디밭으로 뛰어나가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나절을 머문다.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이유는 결국 '시설'이 아니라 '공간'에 있었다.

그런다면 함께 출산을 7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우리 영행에는 이러한 공간이 존재하는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행 관내에 유사한 시설과 공간이 없어 아이들과 함께 광주 등 인근 대도시의 키즈카페로 '일정'을 떠난다고 한다.

전국 1위라는 자랑스러운 출산율 뒤에 정작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아이들 가장 많이 낳는 고장이려면 그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고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6만평은 우리 영행이 단밀에 따라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그러나 1만평,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 5000평 규모만 확보되어도 의미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핵심은 규모 자체가 아니라 좁혀져 있는 어린이 시설들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실내 놀이 시설, 야외 놀이터, 가족 휴식공간, 체험 시설이 한 부지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족 단위 방문객이 번나질 하루를 머무는 '체류형 공간'이 된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영행군 청년육아농터가 그 사례다. 본래 육아 기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복합시설로 지을 경우 국비보조금이 추가되고 부디라는 이유로 청년지원 기능까지 없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정작 육아 기능 하나만 소화하기에 애도 공간이 비좁아, 육아 기능도 청년 기능도 어느 쪽 하나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좁은 부지에 여러 기능을 묶어넣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똑똑히 확인한 셈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읍내의 좁은 부지에 시설을 묶어넣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소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 어린이 관련 시설을 단계적으로 집약해 나가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지금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5년 뒤, 10년 뒤 영행의 모습이 달라진다.

9대 영행군의회 임기도 이제 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 2007년부터 한결같이 주장해온 소신을,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집행부에 전하고 싶다. 영행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 하나'가 아니라 '공간 하나'다. '영행에 가면 아이와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곳이 있더라'는 한마디 입소문이 청년 가족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좁은 읍내가 아닌 넓은 들녘 위에 아이들이 웃음이 한데 모이는 그 공간이 영행에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공소시효'로 살아난 전재수, '허위사실'에 발목?



아침 햇살  
고하승 주필

통일교 공돌수 수의 의혹 수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실도 빠져나갔다.

그런데 그의 보좌진 4명은 조직적으로 PC 저장장치를 파손해 유기준 증거인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론 그는 법망을 빠져나갔지만, 그의 수속처리 움직임은 젊은 보좌진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그를 보호하려다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수법이 마치 007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법이라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저장 매체를 먼저로 내려치거나 인근 발과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등 기괴한 범죄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

실제로 잠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전 후보 보좌관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전 후보 보좌관들은 작년 12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후보 선임비서관이 합수본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인턴 비서관에게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있는 PC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 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라며 자신의 PC 뿐만 아니라 부

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보좌관은 그의 보고를 받은 뒤 '포맷(초기화) 전 필요한 자료는 백업해두라'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증거인멸을 위한 포맷을 승인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선임비서관은 전 후보의 서울 사무실 8급 비서관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문의했고, 이 비서관은 'SSD 카드를 꽂았던 PC는 다시 한 번 더 포맷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방법을 알려주었다. 선임비서관은 PC 포맷을 마친 뒤 PC에서 분리한 저장장치까지 모두 파손했다.

그는 PC의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브로 해체한 뒤 팔찌로 내리치고,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러뜨리는 방식

으로 파괴해 버렸다. 그렇게 파손한 저장장치를 주거지 인근 밭 또는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선임비서관을 비롯, 증거인멸에 가담한 전재수 후보 보좌진 4명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앞서 합수본은 통일교로부터 금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물품 없는 손발만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전재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

합금 통치와 캐피탈에 등 고가의 명품 시계 수의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더라도 고가 선거 과정에서 이런 의혹들을 정경으로 부인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전재수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줄곧 "공돌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거나 "100번이라도 받아도 없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런데 전재수 보좌진이 모두 증거인멸로 재판에 넘겨진 걸 보면 이런 발언들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는 당선자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전재수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맞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설사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재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만큼 수사기관도 이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여의도 정거장에서 전재수 후보를 '공소시효'가 실했는데 '허위사실 공표'에 발목이 걸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기고

## 전통시장 안전관리, 예방이 최선



황형현  
전남 소방청서 예행인장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불교계 최대 행사인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시기로, 전국의 전통시장과 문화재를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중행사과 볼거리가 많은 다양한 행사가 사람들로 인원이 증가하고 임시 전기시설과 화기 사용도 많아 관리는 만큼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강진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대표 사찰인 무위사가 자리하고 있다. 무위사는 국보와 보물을 다수 보유한 전라남도의 대표 전

통시장 중 하나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국락보전과 아티스테이션 변화 등은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되어 온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는 대부분 목재 중심으로 건축물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으며, 화재 발생시 단순한 재산피해를 넘어 수백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전후에는 연등 설치와 촛불 사용,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요인이 평소보다 높아진다. 산림과 인접한 시장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산불로까지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실제로 전국에서는 촛불·향초 취급 부주의, 노후 전기배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정열기구 과열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과 목조건축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화재 화재는 복원이 쉽지 않고, 한 번 소실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강진소방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무위사를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과 대형 목조건축물, 문화재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사중심 중심 현장 행정지도도를 실시해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연등 및 촛불 사용구역 안전관리 ▲소방인대 상 유지관리 상태 확인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초기 화재 대응요령 교육 ▲산림 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사용법 교육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상소화장치점검은 산불 및 사찰 화재 발생시 초기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 여러 산불 현장에서 주민과 관계자를

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해 화재 확산을 막은 사례가 있는 만큼 평소 사용법 숙지와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다.

또한 사찰 관계자와 방문객들의 안전의식 역시 중요하다. 지정된 장소와 흡연 금지, 화기 주변 기연물 제거, 노후 전기시설 사용 자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유도로도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의 전통시장과 문화재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후손에게 안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무위사와 같은 문화재는 강진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

작은 관심과 예방 실천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두가 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화재예방에 동참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일보 siminilbo**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독자전화 0213676-2114 구독신청 022926-0217

편집국 대표 0213676-2114 FAX 021762-8223

정치·행정부 021765-8115 경제·문화부 021926-0392

사회·수도권부 022926-0314 편집부 022926-0242

총무국 022926-0217 영입국 021926-0164 FAX 021762-8223

광고문의 022926-0164 유통부 032675-7956

www.siminilbo.co.kr 세종특별자치시 영동로 국제빌딩 70실 15~19호(의도동, 국동VIP빌딩 6층) 구독료: 연간 180,000원 | 월정 15,000원 | 1부 800원

# 동대문구 대표 휴양시설! 청풍명월의 자연이 어우러진 청풍유스호스텔에서 힐링 어떠세요?

- 소 재 지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3139
- 예약방법
  - ① 개 인 : 인터넷(www.chpungyh.co.kr.) 예약
  - ② 단 체(30명 이상) : 전화☎ 043 - 652 - 9090 예약
- 객실안내 : 4인실 (거실겸방 + 욕실) / 6인실 (거실 + 방 2인 + 욕실)
- 부대시설
  - ▮ 강당, 세미나실, 운동장 [이용료 별도 문의]
  - ▮ 바비큐장, 노래연습실, PC방, 농구장 등 [무료]
- 주변 관광지 ● 사진출처 : 제천시청

